

中 불법조업 근절 즉각 총기 사용

당정, 벌금도 2억으로…인력·장비 보강 등 9324억 투입

한·중 상설고위협의체 신설 추진

정부와 한나리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에 9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한·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 대회에서 불법조업 저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고,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체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

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 to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도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 한다.

기준에는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총 9324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내년 소요예산 10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 총리실장은 “인력·장비 보강, 총리 지급·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타’ 아라온호 남극서 러 어선 구조

러시아의 조난 어선 스파르타호 구조에 나선 한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왼쪽)가 성탄절인

25일 오후 6시경(한국시간) 8일만의 항해 끝에 사고지점(남위 74도 57분, 서경 159도 16분)에

도착했다. 구조를 애하게 기다려왔던 스파르타호의 선원들이 손을 훔들며 아라온호를 반기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초 한·중·일 FTA협상 개시”

中 원자바오-日 노다 합의

중국과 일본이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내년 초 개시한다는데 합의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5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갖고 3국 FTA에 대해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고 노다 총리가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우리는 FTA 협상의 조기 개시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은 중·일·한

FTA와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작년 5월 FTA 산관학(產官學) 공동 연구를 시작한 한·중·일 세 나라는 최근 공동연구를 매듭지으며 내년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에 달하는 동북아경제권의 무(無)관세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北, 南사업가에 조문 요구

민경련 등 조문금 요청

북한의 일부 기관들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무리한 조문 유치와 조문금 요구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베이징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북측 단체들은 자국 공관이 마련한 조문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면 차후 대북 사업 과정에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연길을 하면서 그에 덧붙여 조문금을 내리는 요구까지 절들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 지난 19일부터 중국 내 베이징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총영사관, 단동(丹東)영사사무소, 엔지(延吉)영사사무소, 펑진(天津)북한식당 등에 조문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북한 측은 조문소가 개설된 지 이를 후인 21일부터 일반 중국인에게 조문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측 단체들은 자국 공관이 마련한 조문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면 차후 대북 사업 과정에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연길을 하면서 그에 덧붙여 조문금을 내리는 요구까지 절들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 지난 19일부터 중국 내 베이징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총영사관, 단동(丹東)영사사무소, 엔지(延吉)영사사무소, 펑진(天津)북한식당 등에 조문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북한 측은 조문소가 개설된 지 이를 후인 21일부터 일반 중국인에게 조문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F1 성공 개최·기업 유치 성과

■ 2011 전남도정 결산

올해 전남도 살림살이는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한 준비를 알차게 했다는 게 도민들의 대체적 평가다.

(핵심 현안이었던 F1(포뮬러원) 대회를 비롯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수도권에서 3시간대 진입이 가능해졌다.

기업유치는 517개 업체에, 투자 규모만 9조7000억원, 1만 8000명의 고용 효과도 거둬 외국인 투자유치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7년 동안 추진한 친환경 농·수축산업으로 친환경 인증 점유율이 농업 57%, 수산 98%, 축산 36%

J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땅 소유 주인 농어촌공사와 땅값 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1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부동지구는 최근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아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무안공항은 개항 4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전세기만 오락가락하는 ‘반쪽’ 국제공항으로 남아 있고 KTX 호남선의 경우 광주~목포 구간 노선이 4년째 결정되지 못해 미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7년 완공도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한번 개최에 900억원이 필요한 F1대회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매년 200억~300억원 가량의 국비 지원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F1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매년 500억 원의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전남도가 모두 져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현안에

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새해에는 이같은 현안 해결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 엑스포 106國·9개 국제기구 참가

J프로젝트·KTX 노선 결정 진척 없어

대책으로 기업유치와 친환경 농수축산 확대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F1 대회의 경우 올해부터 전남도가 전면에 나선 뒤 16만명의 관람객과 기업스폰서로 성공해 단기(21만1000㎡) 조성, 영광 친환경전기자동차 선도시 선정 등도 주요 성과들이다.

내년 열리는 여수 엑스포도 106개 국가·9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했다. 전시시설의 종합 공정률도 82%에 달하며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전라선 KTX 개통으로

로 전국 최고다.

미래의 전남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시스템 시험단지 구

축사업 선정과 5GW 풍력프로젝트 분기 추진, 신재생에너지전용 단지(21만1000㎡) 조성, 영광 친환경전기자동차 선도시로 선정 등도 주요 성과들이다.

반면,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과 무안공항 활성화, KTX 노선 결정, F1 대회 국비지원 등은 여전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北 김정은, 총비서·최고사령관 대행

軍·노동당 주요 권력기구 모두 장악한 듯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공백이 생긴 노동당 총비서의 기능과 역할을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상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이 군(軍)뿐 아니라 노동당까지 북한의 주요 권리 기구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매체들은 26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냄따라 내놓았다. 이 구호는 김정일 시대에도 사용하던 것으로 ‘김정일 동지를’를 ‘김정은 동지’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노동당 규약상 당 중앙위원회의 수반은 당 총비서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 구호는 김 부위원장이 사실상 총비서임을 의미하게 된다.

노동신문은 26일 “전국의 모든 당

조직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전당이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춰 북한은 김 부위원장은 군 최고사령관뿐 아니라 당 총비서로 추대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사

망으로 발생한 권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우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3년 전인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추대형식으로 군 최고사령관에 올랐고, 1994년 김 주석 사망 이후 3년상을 마친 1997년 전 주민 추대 형식으로 당 총비서가 됐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따르고 있는

김 부위원장의 입장에서 군 최고사령관에 올라 최고 권력기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당 총비서가 됨으로써 ‘유일자체제’를 완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작년 열린 9·28 당 대표자회에서 유명무실했던 노동당 조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을 충원하고 그동안 사설상 기능이 정지됐던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되살렸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노동당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적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국방위가 북한 최고의 권력기구이기는 하지만 정책결정 기구에 가까운 데 비해 노동당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실행조직이라는 점에서 압축적인 승계과정을 거치는 김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노동당의 조력이 절실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포인트추나요법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봉선동 1036-6번지 모아2차@사거리 운동처방, 목, 허리, 어깨, 다리 관리 (월~일, 주·야간) ☎(062)651-9030
유니베리남양알로에복구내리점	존슨썬팅
북구 우신동 말바우사거리 동진빌딩 301호 건강식품, 화장품 ☎(062)268-7755	서구 내방동 470-3번지 현대주유소옆 열·차단썬팅 카오디오·후방카메라·마직경보기 대표 문상기 ☎(062)375-9416
황해건강원	장흥정
서구 쌍촌동 1226-6 상무2동 주민센터옆 장어즙, 봉어즙, 가물치즙, 흑염소 각종과일즙, 구찌뽕, 흥삼 대표 봉형호 ☎(062)401-1113	서구 화정4동 806-9 우체국에서 광주운행간 유형오리 불고기 전문점 새로운 단장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서호숙 ☎(062)384-5255
자연그리고머리풍경	유정천골프연습장
두암동 동강대후문사거리 청명맨션앞 미용계정원 특허받은 용실 SBS 모니터링 천재료클리파, 콩염색전문/OPEN 기념할인행사 콩피마 20.000원, 콩염액 15.000원, 콩.5.000원 ☎(062)266-8121	학동 세리미@옆 유정천사우나3층 맞춤개인레슨·필드레슨·실의연습장레슨 대표 (062)225-0074
황바우한의원	다사랑의료기
두암동 841-5 말바우소방소앞 요통, 어깨통증, 슬통등 각종통증치료전문 원장 이용식 ☎(062)262-5275	학동 750-70 삼익세리미@입구 의료기 전문업체 회장 박동구 ☎(011)607-9026
튀김먹자	창평국밥
양립동 기독교병원길 서양식마을금고옆 오징어튀김, 상추튀김, 고구마튀김 대표 김보경 ☎(062)234-7259	북구 문흥동 991-2번지